

文대통령 “독도는 우리땅...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았다”

제 99주년 3·1절 기념식

일본에 진실한 반성·화해 촉구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로 99주년인 3·1절을 맞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나라 안팎에 천명했다.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일본에게는 진실한 반성과 화해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열린 ‘제 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10만 여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감된 장소다. 수감자 가운데 90% 가량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바로 세우야 한다”면서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의 땅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앞서 옥사에 마련된 특별전시를 관람한 뒤 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선 안된다”면서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여지지 않는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선 가까운 이웃나라답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고통을 가한 이웃 나라들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면서 “일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다.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열리는 3·1절 행사이자 99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대내외에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들과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기념식 장소는 기존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택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에 직격탄을 날린 무게감을 더하기에 충분했다.

99주년 3·1절 행사를 시민들과 함께 치르고,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을 장소로 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 때문

이었다는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3·1운동을 생생한 기억으로 살림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광복 100년으로 가는 동안 한반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를 완성해야 한다. 분단이 더 이상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빈부, 성별, 학벌, 지역의 격차와 차별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를 만들어 내자. 김구 선생이 꿈꾼,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난 후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역사관 입구에서 독립문까지 3·1절 행진을 하며 만세삼창을 외쳤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와 미국과 북한간 대화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

지주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SK·LG 등 대기업소속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의 사익 편취나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해 총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비롯한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이 허용됐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목적과는 소속 회사와 거래하는 등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실태조사에 나서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62개사다. 5000억 미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7개사도 포함됐다.

SK, LG, GS, 현대중공업, 농협, 한진, 부영, 삼성, 한화 등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발적 협조를 받아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당이 아닌 방식으로 수익을 얻어 사익 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대상별로 자료작성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 배당 이외 수익에 대한 조사내용을 대부분 제외했다. 개인정보나 법 위반 혐의 포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도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월 중순까지 자료를 받아 실태조사결과 등을 거쳐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공직선거법 처리 무산... ‘능장처리’에 혼선 불가피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처리 합의
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 차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한 공방으로 시간을 끌다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1일 헌정특위는 자정 선거구 획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를 두고 ‘면피성 처리’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국회는 오는 5월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산화하면서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당 원내대표들과 법사위 안건처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과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 대정부 현안 질문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다”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빚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

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690명, 기초의원 2927명으로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27명이 증원된 것으

로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29명이 증원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처럼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증원된 것에 대해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해 부득이하게 지방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정치개혁 소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 회동 추진... 외교·안보 현안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5당 대표를 만나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 대화와 이와 관련한 미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공유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정부수석실에서 각 정당 지도부의 일정을 확인하

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각 정당에 회동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가져왔지만, 지난해 7월과 9월 회동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쇼통’이라며 불참한 바 있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을 회동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홍 대표측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원 기자